

“59조 추경, 野 협조 시급… 北 호응하면 코로나 방역 지원”

尹 대통령, 첫 시정연설
“새 정부 5년 미래결정 중요한 시간
주요 국정사안 긴밀히 논의할 것
국민 희생, 자긍심 되도록 보상”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첫 시정연설을 통해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역대 대통령 중 최단기간에 이뤄졌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59조4000억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라며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의 전시 연합내각 구성을 예를 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

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까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역설하면서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연금 개혁과 세계적인 산업

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 들어 16번째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면서도 코로나19가 대유행 중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번 주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

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힘을 모았다”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이다.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며 “오늘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저는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공급망·가계대출·중경제… 올 韓경제 리스크

전경련, 상경계열 교수 150명 설문
47% “공급교란 심화 가능성 높아”
‘원자재 수입선 다변화’ 대응책 꼽아

올해 한국 경제 성장의 3대 위험 요인으로 공급망, 가계대출, 중국경제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16일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대학 상경계열 교수 150명을 대상으로 신정부가 유념해야 할 경제리스크를 설문 조사한 결과 ▲공급망 교란 ▲가계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발 경제위기 ▲중국경제 경착륙이 3대 위험으로 집계됐다.

또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속 고물가)과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제조업 리스크도 큰 우려는 아니지만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됐다.

응답한 교수들의 47.3%는 미·중 갈등 격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공급망 교란 심화 가능성이 높고, 53.3%

는 우리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망 교란에 대비해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42.2%)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업구조의 개선(16.5%)과 해외자원개발 확대(15.3%) 등이 뒤를 이었다.

가계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발 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41.3%가 발생확률이 높고, 42.0%는 발생시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치명적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교수들이 제안한 가계부채의 효과적 해결방안으로는 기준금리 인상(28.5%), 고용확대를 통한 가계의 금융방어력 강화(17.1%) 등이 주를 이뤘다.

중국 부동산 버블과 과도한 기업부채 붕괴, 코로나19 봉쇄 등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해서 39.3%가 발생 가능성이 높고, 42.7%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봤다. 이를 대비해 우리 정부는 수출 다변화 지원정책(47.0%),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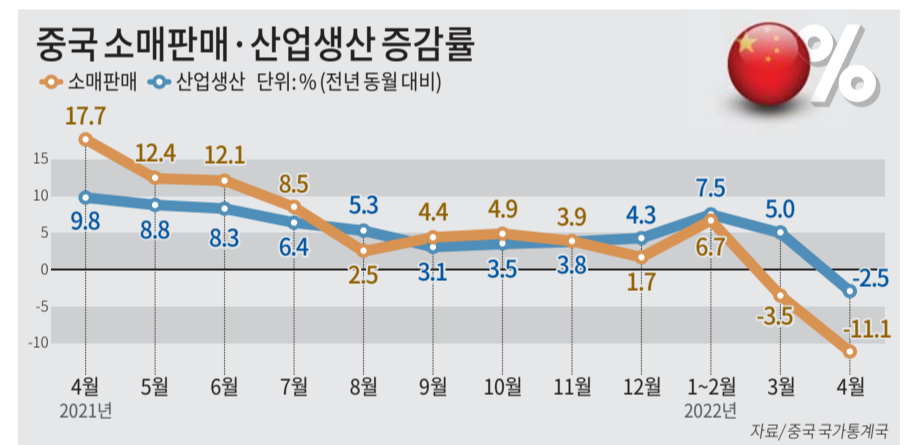
정적 금융시스템 방어력 구축(29.5%), 대중 의존도 높은 산업 내수지원책 강화(18.6%) 등의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40% 이상은 과거 오일쇼크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으며 금리인상 유지, 경기침체보다 물가안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제조업 위축과 관련해서 41.3%가 발생확률이 높다고 보고, 탄소감축 기술 지원 확대(33.8%)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신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된 복합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출범했다”며 “정책적 역량이 제한돼 있으므로 공급망 교란 심화 등 발생 가능성이 높고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리스크부터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中, 소비·생산 2년만에 최악 ‘봉쇄령 쇼크’

● 차이나 뉴스 & 리포트

상하이 봉쇄에 베이징도 봉쇄 수준 4월 소매판매 전년 대비 11.1% 감소 41개 산업 중 플러스 기록 18개 불과

중국 경제가 봉쇄령의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의 봉쇄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베이징도 사실상 봉쇄 수준으로 방역 조치를 집행하면서 소비와 생산 부문 모두 우한 코로나 사태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내었다.

16일 중국 국통계국은 4월 소매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11.1% 감소했다고 밝혔다. 3월 소매판매 증가율 -3.5%를 크게 밑도는 것은 물론 시장 예상치 -6.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증감률로 보면 4월 소매판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020년 3월 -15.8% 이후 25개월 만에 최저치다. 3월 하순부터 시작된 상하이 봉쇄에 따른 영향이 4월에 본격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생산 부문 역시 충격이 컸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9%로 집계됐다. 3월 5.0%와 비교하면 7.9%포인트나 낮아졌고, 시장 예상치 0.4%에도 크게 못 미쳤다. 2020년 2월 -13.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41개 주요 산업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18개에 불과했다. 특히 시멘트(-18.9%), 정유(-10.5%) 등 인프라 관련 산업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토미 우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중국의 경제 활동은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1분기 이후 가장 위축됐다”며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되고, 각 지역의 통제에 따른 물류 지연이 국내 공급망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6.8% 늘었다. 시장 예상치 6.0%에는 다가갔지만 3월 증가율 9.3%에는 못 미쳤다. 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도 계획만큼 원활히 되지 않았던 얘기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의 경제를 책임진 도시들이 봉쇄되면서 고용 상황도 악화됐다. 도시 실업률은 6.1%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16~24세 실업률은 18.2%에 달했다.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5.5% 인략) 달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국통계국 관계자는 “전염병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사실이지만 단기적이고 외부적 요인에 불과하다”며 “코로나19 예방과 통제로 경제는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

尹 “연금·노동·교육개혁 더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

» 1면 ‘경제·위기·개혁 강조’서 계속

이같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행동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힘을 보탰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 때 야당 의원들의 의석마다 걸려있던 피켓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야당 의원들은 구호 없이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한 채 시정연설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 역시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 등의 대목에서 총 18차례의 박수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퇴장하며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기립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이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안내를 받으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를 마친 윤 대통령은 민주당 의석을 향해 이동하며 민주당, 정의당 및 국무위원

들과도 악수를 했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장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 첫 시정연설 소감에 대해 “국회에 와서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우리 민주주의와 의회주의가 발전해나가는 데 한 페이지가 되길 바란다”며 “개인적으로도 아주 기쁘고 영광스러운 자리였다”고 답했다.

아울러 본회의장을 나서면서 민주당·정의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회의 관계에서 여야가 따로 있겠나”라고 말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